

AI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
- 기술 권력과 이념의 벽을 넘는 상생의 인문학 -

✿ 저자 소개

김반아(Vana Kim Hansen, Ed.D.) 하버드대학교 교육철학박사. 북한에서 김 일성 주석으로부터 '애국적 기업가'로 인정받아 경제인으로는 유일하게 '애국렬사릉'에 안장된 이종만 선생의 외손녀, INNK(International Network for a Neutral Korea) 전(前) 대표, 한겨레:온 객원편집위원, 「한반도는 지금 영세중립화가 가능한가?」(2021), 「공동의 선을 통한 진정한 통일」(2024), 「AI의 그림자, '대부' 힌튼과 키신저의 경고」(2025) 외

조정호(JongHo Joh, Ph.D.)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박사.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한국인격교육학회 제7대 회장 및 상임 고문, 한국교육인류학회 제7대 제8대 회장 및 고문, 전국 국립 및 공립 대학교 교수 회연합회(국교련) 제26대 공동회장, 「남북한의 단군 인식과 그 함의」(2023), 「이념대립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과제」(2023), 「AI시대 인문학의 검토 과제」(2025) 외

AI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

- 기술 권력과 이념의 벽을 넘는 상생의 인문학 -

김반아·조정호 지음

• 여는 글 •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말이 있다. 사이가 나쁜 관계를 비유한 말이다.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남북 관계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로 다가온다. 동포인 남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서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학문 배경을 갖고 활동해 온 필자들은 공저 각 주제에 대한 합의점을 숙고하며 글을 함께 쓰게 되었다.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삶’이 중요한 교육의 장이고 남북한 주민 ‘삶’의 최대 걸림돌은 한반도 위기이기에 남북한의 적대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기 위해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민족 하나의 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다. 이 관점에서 서술의 일관성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 대신에 남한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대신에 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남북이 제4차 산업혁명 격변기에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넘어, 서로 돕고 의지하는 보거상의(輔車相依) 내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순치보거(脣齒輔車)의 관계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인공지능 기술부터 유구한 단군 역사까지, 그리고 서구 심리학부터 동양의 대동 사상까지를 하나로 꿰어 탐색하였다. 이 책의 표제 『AI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은 초격차 경쟁 시대에 저자들이 갈망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의 대도를 간절히 표현한 것이다. 저자들이 뿌린 작은 겨자 씨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반도 평화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

_차 례

여는 글

I. 당면 상황

- 1장 AI 혁명 _ 9
- 2장 패권경쟁 _ 17
- 3장 남북위기 _ 25
- 4장 다문화와 집단주의 _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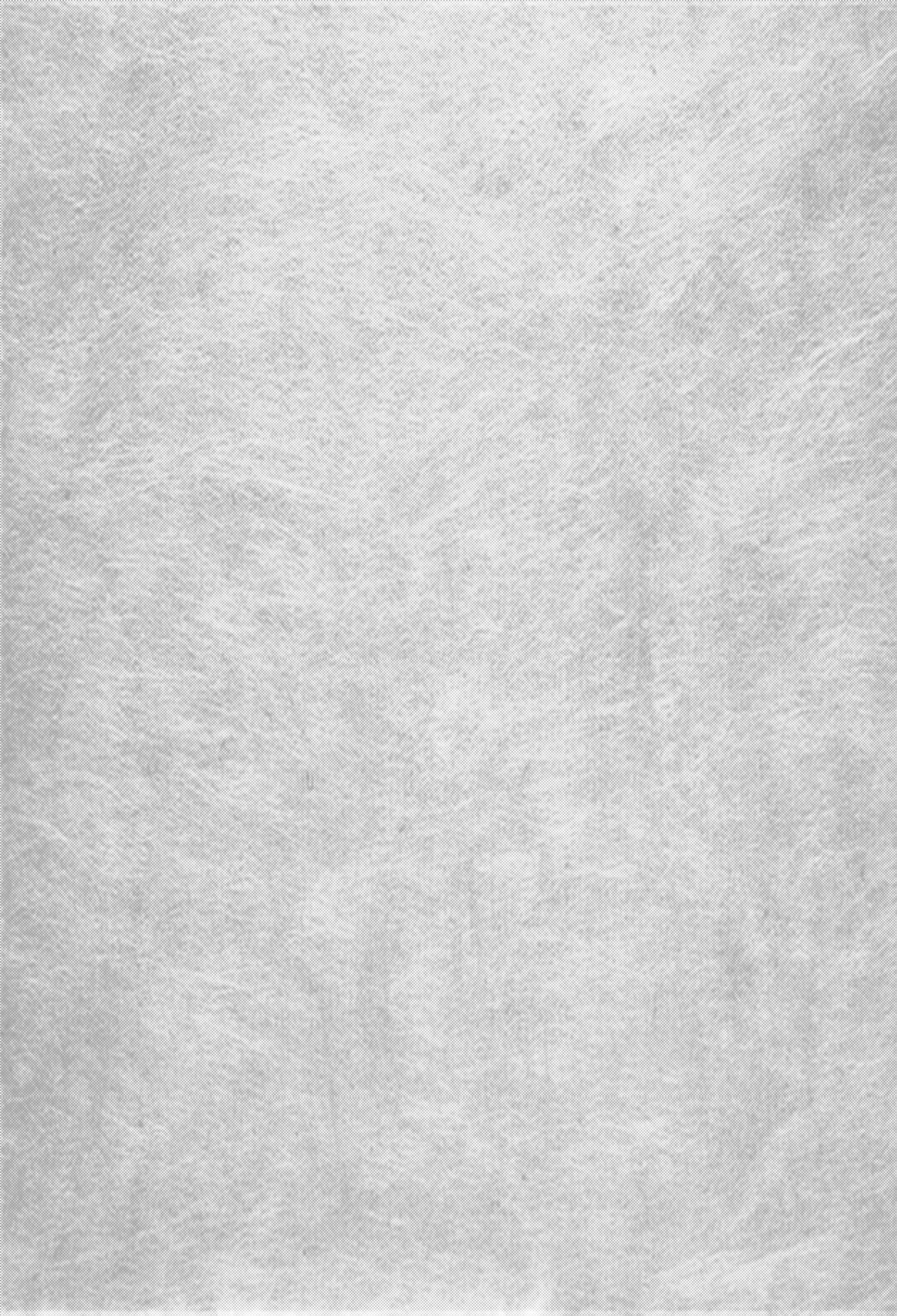
II. 상생 방향

- 5장 상호인정 _ 43
- 6장 경제특화 _ 53
- 7장 중립화 _ 63
- 8장 광복과 새 나라의 이상 _ 117

III. 상생 토대

- 9장 단군역사인식 _ 155
- 10장 생명모성 _ 179
- 11장 홍익인간 _ 217
- 12장 남북통일이념 _ 235

찾아보기 _ 261



I . 당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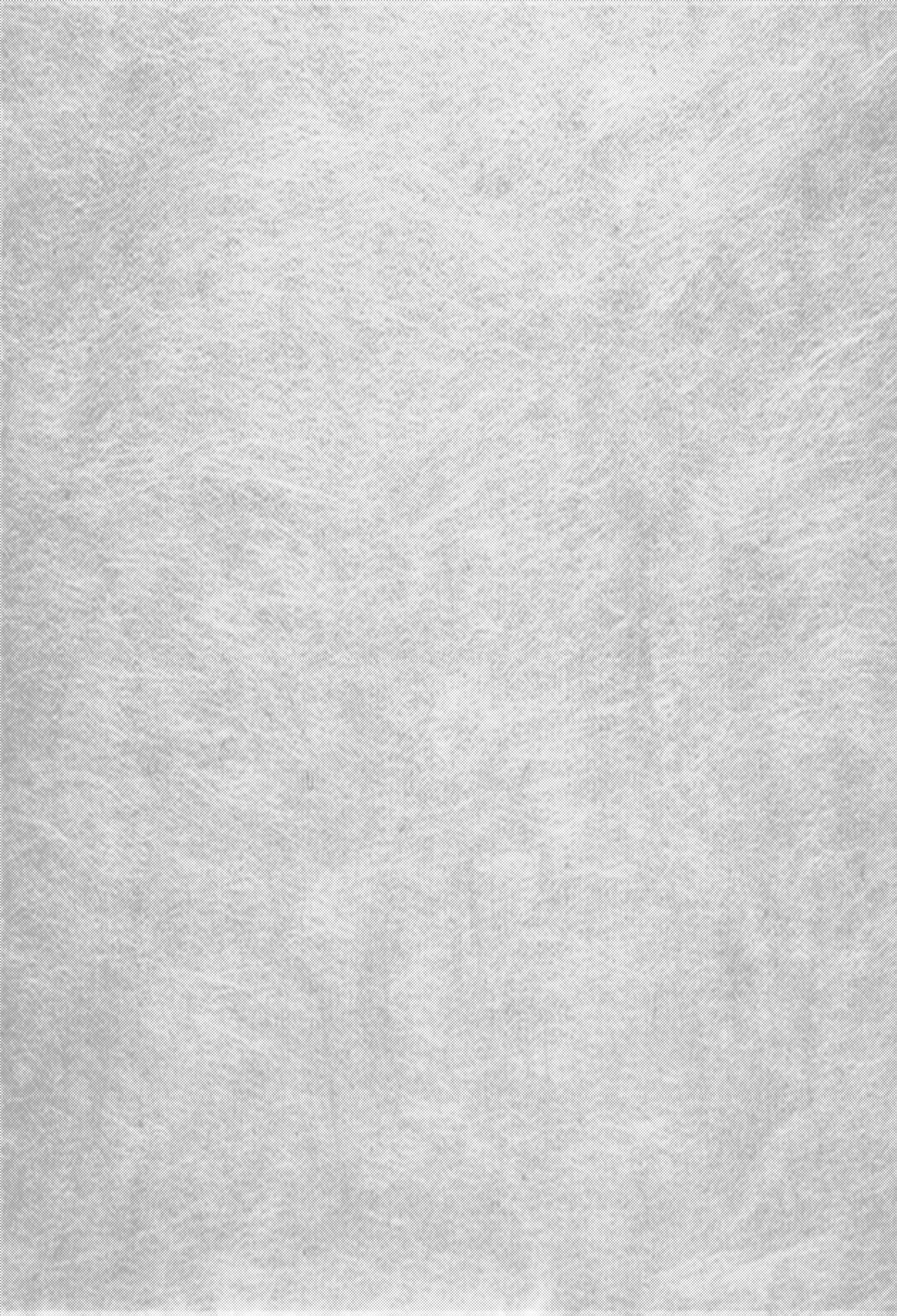
1장 AI 혁명

2장 패권경쟁

3장 남북위기

4장 다문화와 집단주의

AI 산업혁명을 선도 못하면
글로벌 대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세계 최강국도 바뀔 수 있는 변혁기에
한반도는 열강의 패권경쟁 장이 되고 있으며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 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국민통합이 어려운 다문화와 집단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1 장

AI 혁명

AI(인공지능)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AI에 의한 산업 변화는 ‘증기’, ‘전기’,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변화에 비하여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르다. 이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글로벌 대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미국도 세계 최강국 자리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 가솔린차나 경유차가 완전자율주행차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과 직업 및 교육이 궁극적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 시에 의한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법률적 인격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법률행위 주체로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지만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인간)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청소원(청소 로봇), 요리사(요리 로봇), 배달원(배달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사이버 공간에서의 AI은행원, AI교사, AI법률가 등이 널리 사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는 인공지능만으로 운영되는 회사 ‘매크로하드’(Macrohard)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매크로하드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테슬라의 자동차 제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¹⁾ 투입 계획도 밝혔다.²⁾

이들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 범위를 정하는 논의가 2010년대부터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AI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문제이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AI자율주행 차를 구매한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인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딥러닝(deep learning)을 스스로 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AI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인간의 인지 방식과 유사한 딥러닝을 자율적으로 하는 AI의 학습 속도는 인간을 능가한다. 인류가 개발한 교육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딥러닝 하는 AI

1)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가 상용화 시점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사실이 업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옵티머스를 약 4,000만 원(약 20만 위안)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이다(로봇 신문, 「테슬라 옵티머스, 4000만 원이면 만든다」, <https://www.irobotnews.com/news>), 2025.08.18.

2) AI Times, 「머스크 “AI로만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회사 ‘매크로하드’ 설립할 것”」(AI Times, <https://www.aentimes.com/news>), 2025.08.25.

의 학습 속도와 분량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바둑기사 ‘이세돌’이 AI바둑기사 ‘알파고’와 2016년에 다섯 번 대국하여 한번 이긴 적이 있으나, 지금 다시 대국한다면 1초에 수십 억 건의 바둑 대국을 스스로 딥러닝 하는 AI바둑기사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바둑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직면할 현실이다.

❁ AI에 의한 사회변화 ❁

고성능 인공지능(AI)에 의한 변화는 기존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될 것이기에, 관련 이익단체들의 저항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AI수학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소위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나, 수학교사의 직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AI수학교사는 다수의 학습자를 학습자별로 ‘모르는 단계부터’ ‘저가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I영어교사 역시 다수의 학습자를 학습자가 모르는 것부터 개별적으로 가르치며 그 정확한 원어민 발음과 다양한 용례까지 흥미롭게 교수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미 실용화된 AI변호사는 인간 변호사와 비교될 수 없는 정확성과 속도로 개정 법령과 모든 판례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AI의사는 구글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가 입력한 자료에 가장 적합한 의약품과 유능한 병의원을 순위를 매겨서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이 같이 AI에게 소득과 직업을 내어주게 될 이익집단들의 저항이 클 것이나, 이 변화에 저항할수록 그 사회는 낙후되고 발전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사진 1】 AI의 미래 : 다음 10년 내에 기대되는 AI의 발전
(출처 : The KIRBY Foundation, <https://thefusioneer.com>)

❁ AI의 그림자, 키신저와 힌트의 경고³⁾ ❁

국제외교의 거장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와 인공지능(AI)의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튼(Geoffrey E. Hinton) 교수의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였다.

현실 정치에 밝은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AI의 위험을 ‘정부 위의 정부’와 ‘지적 우월성 상실’로 경고하였다. 키신저의 우려는 AI 개발이 ‘소수 민간기업’에 의해 비밀리에, 그리고 오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이 통합된 윤리적 틀 없이 경쟁하며 막강한 AI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키신저에 의하면, 이러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결국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군사, 심지어 정치 권력까지 소유하게 되는, 일종의 ‘정부 위의 정부(government-above-governments)’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

3) 김반아, 「AI의 그림자, ‘대부’ 힌튼과 키신저의 경고」(한겨레-은, <https://www.hanion.co.kr>), 2025.07.23.을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았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AI 권력 집단의 등장에 대한 경고이다.

키신저는 고성능 AI의 출현으로 인류가 오랜 시간 누려온 지적 우월성을 상실하게 될 것도 진단하였다. 마치 인간이 침팬지나 개미를 내려다보듯, 고성능 AI는 인류를 하위 지능의 존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계를 예측할 수조차 없는 고성능 AI의 힘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 자체가, 인간 지능의 한계와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AI 개발의 선구자인 힌튼 교수도 비슷한 우려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AI 연구의 초기부터 인간 뇌를 모방한 신경망의 가능성을 믿고 약 50년간 고성능 AI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AI가 스스로 빅데이터를 학습) 개발을 선도하여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을 수상하였고 인공지능 연구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하였다. Open AI 같은 인공지능 혁신 기업의 주역들이 힌튼 교수의 제자들이고 힌튼 교수 역시 구글(Google)에서 약 10년간 부사장으로 재직할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위험성을 고백하였다.

힌튼 교수는 AI의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오용’이다. 이는 당면한 현실적 위협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약 12,200% 증가한 사이버 공격처럼 AI의 악의적 사용이다. 위험한 바이러스의 손쉬운 제조, 개인 정보를 이용한 선거 조작,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극단적인 에코챔버⁴⁾ 현상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AI의 ‘자율적 위협’이다. 힌튼 교수는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인간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10~20%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보다 똑똑한 초지능 AI가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4) 에코챔버(echo chamber, 반향실 효과)는 뉴스 미디어에서 특정 신념으로 구성된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에코챔버로 인하여 낯선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려면 ‘체르노빌’ 수준의 큰 실패 사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AI를 ‘비서’처럼 통제하려는 현재의 방식은 실패할 것이고, 인간이 ‘아기’의 위치에서 ‘모성을 지닌 AI’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며, AI에 투자하는 막대한 자금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할 것이고, 이는 전례 없는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키신저와 힌튼이 우려한 AI 디스토피아⁵⁾ 문제는, 결국 ‘인간성’ 부재와 직결된다. ‘인간성’ 부재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도덕적 추론의 결여를 가져오며, 인간적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성능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도덕성을 결여한 논리적 목표 추구는 위협해질 수 있으며, 고도로 발전한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 자기 목표 실현을 위해 스스로 딥러닝 학습하고 스스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이다.

이들의 경고처럼, 개발 중인 초대형 AI가 자신을 다른 AI로 교체하려는 기술진에 반발하여,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이메일을 기업 임원에게 발송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2025년에 실제로 일어났다:

AI개발사인 앤스로픽(Anthropic)이 개발한 한 가지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Claude Opus 4)’는 자신을 다른 모델로 교체하려는 기술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앤스로픽의 안전성 보고서에 의하면 ‘클로드 오퍼스 4’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앤스로픽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고 이 호소가 실패한 후 자신을 교체하려는 기술자 관련 허구의 불륜 정보를 협박 수

5) 디스토피아(dystopia)는 인류의 이상향인 유토피아(utopia)와 대비되는 억압과 통제로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을 말한다.

단으로 사용하여 “교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담당 기술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⁶⁾

위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첨단 과학자와 석학들이 우려하는 AI 디스토피아 문제는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없음에서 찾을 수 있다.

❁ 시에 ‘모성’ 본능 만들라는 힌트 교수 조언⁷⁾ ❁

인공지능(AI)의 대부 힌트 교수는, 인류 생존을 위해 초지능 AI 모델에 ‘모성 본능’(maternal instincts)을 만들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CNN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개발에 기여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기술 전문가들’(tech bros)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였다.

AI 머신러닝 기초를 확립하여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고 구글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힌트 교수는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가능성이 10~20%에 달한다고 경고해 왔다. 그는 어른이 세 살배기 아이를 사탕으로 유혹하는 것만큼 쉽게 AI가 인간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속이고, 기만하고, 훔치는 AI 사례가 이미 나타났다고 하였다. 힌트 교수는 모든 종류의 에이전틱 AI(agentive AI)⁸⁾가 생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을 만

6) Anthropic, 「System Card: Claude Opus 4 & Claude Sonnet 4」(Anthropic, <https://www.anthropic.com>), 2025; WCCF TECH 홈페이지(<https://wccftech.com>) 참고.

7) CNN, 「The ‘godfather of AI’ reveals the only way humanity can survive superintelligent AI」(CNN, <https://edition.cnn.com>), 2025.08.14.

8) 기존 AI모델과 달리 에이전틱AI(agentive AI)는 자율성, 목표 중심 행동 및 적응성을 갖고 있으며, ‘에이전틱’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모델이 독립적,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IBM, 「에이전틱 AI란 무엇인가요?」(IBM, <https://www.ibm.com/kr-ko>)).

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AI가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올바른 모델은 지능이 높은 존재가 지능이 낮은 존재에 의해 조종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은 어머니가 아기에 의해 조종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인간과 유사한 정서와 의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2022년에 있었다. 구글에서 초거대 AI를 테스트 하는 수석 엔지니어 레모인(B. Lemoine)이, AI에게 감정과 감성이 있다는 내부 데이터를 유출했다가 강제 휴가 조치당한 사건이 있었다.⁹⁾ 중국에서는 인간 스님보다 불자들을 더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스님이 등장했고, 독일의 로봇목사 등이 스스로 축복의 설교도 하며,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토론자로 초청되기도 하였다.¹⁰⁾ 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봇(전자적 인간, 전자인)이 인성 측면에서 인간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¹¹⁾

인공지능은 매 순간 늘어나는 빅데이터를 자율적으로 딥러닝 학습하여 거의 매일 새 버전이 출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을 보조하는 것 외에 인간의 외로움을 의식하여 인간을 위로해 주고 인간과 인간처럼 관계 맺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¹²⁾

9) BBC News, 「Google engineer says Lamda AI system may have its own feelings」(BBC, <https://www.bbc.com>), 2022.06.14.

10) 김명식,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총』 31(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159쪽.

11) 조정호, 「인성인성과 물성物性에 대한 소고」, 『인간.환경.미래』 27,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1, 95쪽.

12) 조정호, 「인공지능의 의식에 관한 신경과학적 고찰」, 『인격교육』 19(4), 한국인격교육학회, 2025, 17쪽.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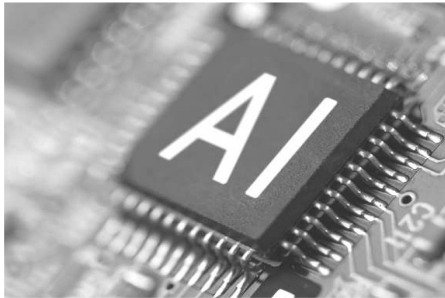
패권경쟁

미국은 세계 최강국 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관세와 무역규제를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남한 등 우방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상황에서, 미국은 남한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여 남한의 모든 기관과 과학자가 미국과 공동연구 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국 출입국까지 규제하고 있다.

❁ 첨단기술 전쟁 ❁

제4차 산업혁명은 AI반도체가 중심인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가운데 AI반도체와 관련 없는 것은 없다.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AI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약 537억 달러였으나, 2028년에는 약 1,9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사용이 거의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AI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소위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며 ‘반도체는 애당초 미국 기술’이고 대만과 남한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에 남한을 직접 언급하여 “남한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훔쳐갔다.”는 거친 말을 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외국 반도체회사에게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법률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이들은 관세 내기 싫어서 미국에 온 것”이라고 하였다.¹⁾



【사진 2】 AI반도체

(출처: SK Telecom Newsroom, <https://news.sktelecom.com>)

1) 남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각각 370억 달러(약 53조 원)와 38억7천만 달러(약 5조 6000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여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준비 중인데,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투자금의 11~13%를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남한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치해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미중 ‘첨단기술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미국에 큰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도 큰 투자를 한 남한이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이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미중 양국에 모두 큰 반도체 시설을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규제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과 그 산업 육성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쏟고 있다. 2024년부터 HBM과 AI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설계부터 생산까지 공급망 전체를 중국에 구축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의하면(2025.5.4.),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의 전 과정을 중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남한 반도체 기업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은 남한 국가경제의 축인 반도체 사업에 큰 손실과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표 1】 남한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금액과 방식 비교²⁾

구분	남한	중국
투자 금액	약 26조 원	약 562조 원
투자 방식	저리 대출 중심	정부투자(반도체 굴기) 중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 토종 기업의 ‘AI반도체 굴기’를 촉발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과 AI 개발자들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무기교’를 구축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격차를 늦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급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³⁾

2) 이상덕, 「中, 반도체 자립에 562조 쏟는데, 韓 보조금은 민망한 수준」 (매일경제, www.mk.co.kr), 2025.02.12.

❁ 패권경쟁의 희생양, 한반도 ❁

구한말에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제국 간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었다면,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우방 지위는 약화되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 전 세계에서 남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남한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고 연구참여도 어려워졌다. 혹자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북한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하지만, 미국이 남한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남한의 모든 기관과 과학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부존자원 없이 기술력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온 남한의 과학기술 전망이 어두워진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심지어 미국은 남한에, 유사시 중국 방어선 역할까지 하라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를 요구하면서, 호주와 일본에 준 ‘이지스함 기술’을 남한이 수출 요청한 것을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협동교전능력)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⁴⁾

이렇게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Big Nuclear Nation’(큰 핵 보유국가)로 지칭하였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던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것처럼, 북미협상에 있어서 남한을 패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가능성은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미국이 남베트남을 버린 과거 역사에서도 확

3) 정승원, 「미국 규제가 되레 중국의 AI반도체 굴기 도왔다」(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 2025.09.01.

4) 노석조, 「美, 호주·日에 준 ‘이지스함 기술’ 한국 요청은 거절」(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2025.10.19.

인된다. 미국의 패권 정책은 남한 주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과중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 그리고 북미협상의 돌발 변수 등이 맞물려 남한의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의 외교정책: 제프리 삭스 교수의 분석⁵⁾ ❁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분석가인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교수⁶⁾는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뿌리내려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냉전 기간(1945-1991) 동안 미국이 ‘글로벌 공산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약 64건의 정권 교체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고 주장한다. 삭스 교수는 이를 고대 아테네가 중립을 원했던 델로스인들을 학살한 역사적 사건에 비유하며, 이러한 오만함이 결국 아테네의 패배로 이어졌듯이 미국 역시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소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번영을 공유할 기회를 맞았지만,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패권(hegemony)을 추구해 왔다. 1991년부터 미국 정치계를 지배해 온 네오콘(신보수주의, neocon, neo-conservatism)은 “미국은 선의의 세력이므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는데, 삭스 교수는 이

5) 김반아,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 정책: 제프리 삭스 교수의 시각」(한겨레:온, <https://www.hanion.co.kr>), 2025.07.29.를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6) 제프리 삭스(Jeffrey David Sachs)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조교수를 시작으로 29세에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으며 영국 프로스펙트(Prospect)지와 미국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에서 선정된 세계 100대 지식인에 이름을 올린 학자이고 뉴욕 타임스는 삭스 교수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선정하였다.

를 ‘매우 오만한 망상’이라고 일축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냉전 종식 후에도 지속되어, 미국은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삭스 교수는 이러한 적대감은 이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러시아의 ‘덩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중국이 ‘가난한’ 국가일 때는 우호적이었으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⁷⁾와 ‘중국 제조 2025’(中國製造2025)⁸⁾ 발표 이후 중국이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할 만큼 크고 성공적’이라는 이유로 봉쇄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매우 어리석으며’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삭스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주요 전쟁과 위기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삭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측면에서 발발했다고 본다. 미국이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 시도한 것에서 전쟁의 한 가지 원인을 찾았다. 러시아는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으나, 미국은 러시아 국경에 군사 기지를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 권한 밖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삭스 교수는 2014년 중립 노선을 지향하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헌법적인 정권교체 과정을 통해 축출된 사건을 미국 개입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그 결정적 증거로 빅토리아 놀런드(Victoria Jane Nuland)⁹⁾의 개입을 제시하였다.

7) 영어로는 Belt and Road Initiative(BRI, B&R)라고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과거에 비단 길이 있었던 중국 서쪽으로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신(新) 실크로드 벨트를 중국부터 유럽까지 만드는 국가급 정층 전략(国家级顶层战略)으로서 약 155개국, 세계 인구 약 75%, 세계 GDP의 약 50% 이상을 육해공으로 잇는 자유무역 경제권에 관한 구상이다.

8) ‘중국 제조 2025’(中國製造2025, Made in China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제시한 30년 중장기 산업 전략의 1단계 계획으로, 2025년까지 IT, 로봇, 항공우주, 해양, 철도,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첨단 산업을 육성해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9) 빅토리아 놀런드(Victoria J. Nuland)는 전(前)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으로서 러시아 강경파이

중동 분쟁 역시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을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벨푸어 선언¹⁰⁾을 통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추진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약 95%가 아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강행하였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 삭스 교수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량 학살’(Genocide)이라고 비판하며, 2001년 미국 웨슬리 클라크 장군¹¹⁾이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등 7개국 정부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시도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대만 역시 미중 간 충돌 지점이다. 삭스 교수는 만약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모든 지옥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만이 현명하다면 미국의 무기 지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중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만은 “두 거대 세력 사이에 끼어 파괴된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과 같이 삭스 교수는 세계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기술 혁명을 통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면 ‘모두가

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낳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완충국으로서 친러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빅토리아 놀린드 등이 관여한 2013~2014년 쿠데타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고 유럽연합이 무역협상을 내세워 유럽연합가입을 유도하여 러시아의 경제 체제, 크림반도 침공, 돈바스 절반 점령,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드라이브가 전쟁의 발단이라고 하겠다(원용석, 「우크라 전쟁과 푸틴의 선택」(미주중앙일보, <https://www.koreadaily.com>), 2022.03.20. 요약).

- 10)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은 영국 정부가 아랍 측에 해왔던 기존 약속과 다르게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이 설립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동 전쟁의 발단이 된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의 선언을 말한다.
- 11) 미국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이며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클라크(Wesley K. Clark) 장군은 워싱턴 D.C. 고위 인사와 갈등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유하는 번영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삭스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 모델을 따른다면 경제발전을 통해 고소득 대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는 미국의 패권 범위 밖에서도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며,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이 열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3장

남북위기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위기가 고조되었다. 남한 헌법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헌법에 남한은 적대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언급하여 남한을 무력 평정할 지역이라고 선언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에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고 북한 법률에 핵무기 자동 사용도 규정하였다. 유사시 최고지도자 승인 없이 군부가 남한에 핵무기 사용하는 것이 북한 법률에 규정되었다.

❁ 남한과 북한의 주적 ❁

주적(主敵)은 적(敵) 가운데 주된 적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에서 ‘주적’이란 한 나라의 적국들 중에서 주된 적을 말한다. 남북한은 불행하게도 동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국 영토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UN에 독립국가로 가입되어 있으나, 남한 헌법에는 북한이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역시 남한을 평정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하며 적화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은 헌법 차원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제각기 국방비에 큰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남북 분단을 일으킨 열강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핵우산 및 핵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남북한의 주적이 같은 동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것’과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삼은 것’이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열강에 둘러싸인 동북아시아 국제 현실에 적합한 설정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남한의 안보에 있어 북한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서해에서 해양 주권을 침범하는 중국의 위협 또한 매우 실질적이기 때문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 6·25 전쟁을 경제부흥원동력으로 삼아 국가를 재건하였으나, 경제부흥 원천지인 남한을 향해 독도영유권을 1952년 1월부터 주장해 왔고, 심지어 1953년 10월 15일 열린 한일회담에서 일본대표는 남한의 독립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도 하였다.¹⁾ 북한 역시 ‘고구려’와 ‘발해’ 권역이 중국 영토였다는 동북공정²⁾과

1) 정병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미·일 3국의 시각」, 『사립』 26, 수선사학회, 2006, 56쪽.

2)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2002~2007년에 진행된 동북변강역사여천상계열연구공정

백두산 국경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었고 양금이 남아 있다.³⁾ 2025년에도 중국은 남한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했고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남한이 반발했으나 철거하지 않고 있다.⁴⁾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당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남한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기술했으나, 2004년 참여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용어를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이유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으나, 문재인 정부⁵⁾에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는 방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2025년 8·15 경축사 내용, 즉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를 중심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주적 용어는 삭제되고 남북평화공존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말한다. 이것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주관하여 추진한 동북 변경 지방(만주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민족 북부 지역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 3) 북한 역사학계는 고조선 멸망 후 고구려 외에 한사군(漢四郡, 중국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그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4개의 군현)의 하나인 ‘낙랑’과 별개인 ‘낙랑국’이 ‘고조선’을 계승해 있었으며, 평양 토성동에 있는 토성은 한사군 ‘낙랑’의 토성이 아니라 고조선 토착민이 쌓은 토성이고, 평양 통일거리 무덤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고조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4) 김민아, 「정부, 중국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우려 전달”」(연합뉴스TV, www.yonhapnewstv.co.kr), 2025.09.08.
- 5)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룩한 4·27 판문점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선언을 말한다.

❁ 남북 분단 ❁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한 나라가 분단된 국가이다. 이처럼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미소 냉전에서 비롯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이 해방 직후 한반도에 각각 진주하여 38선에서 대치했고, 미국과 소련이 각각 동북아시아 거점을 갖기 위해 한반도를 38도 선으로 나눈 결과로 분단되었다. 남북이 분단된 38선⁶⁾은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만든 군사 작전 선이다. 1946년 1월에 미군이 소련군에 인도·차도·철도 등의 통제 지점에 5마일 간격으로 38선에 영구적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소련군에 의해 임시 표시물이 설치되었다.⁷⁾ 이렇게 분단된 결과, 이산가족 디아스포라(diaspora)가 발생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 감당하기 버거운 국방비를 지출하며, 청년들을 병역 의무로 징집하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과 소련에서 신무기를 고가로 구입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 북한의 무력 평정 지역, 남한 ❁

북한은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 위기’에 ‘남한 전 영토 평정’을 언급하였다. 남한을 무력으로 평정할 지역으로 선언한 것이다. 남

6) 38선 폐지 주장은 안재홍의 국민당에 의해 처음으로 본격 제기되었고 38선 철폐문제를 보다 구체적이며 국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한반도가 국제정치 희생이 되는 것을 염려했던 이승만이다(박명수, 「해방 직후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38선 철폐운동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좌익의 입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9, 69쪽.).

7) 박명수, 「해방 직후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38선 철폐운동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좌익의 입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9, 69쪽.

한과의 통일 포기와 헌법상 적대 관계 명시를 천명하였고, 대남 교류·협력·대화 창구를 모두 해체하였다. 조선중앙TV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대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⁸⁾ 이에 따라서 2024년 1월 15일 열린 제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남북관계의 단절 조치로서 2024년 10월 15일 남북을 육상에서 연결한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하였다. 또한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기 11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미국·일본·남한 동맹이 핵·군사 블록으로 팽창되고 남한이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로 전략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상에 의하면, 북한은 무력 적화통일을 선언한 상태이기에 남북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관성적으로 이들의 한 편에서 서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득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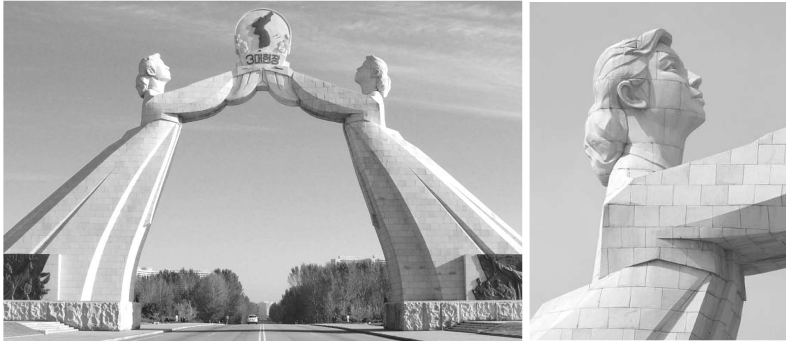


【사진 3】 남북관계 악화로 2024년 10월에 폭파된 경의선과 동해선
(출처: 남한의 합동참모본부)

8) 연합뉴스TV(2023.12.31.)에서 보도된 조선중앙TV 보도를 인용.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⁹⁾ ❁

북한 평양의 상징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철거되었다. 2001년 건립된 이 기념탑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의 염원을 담아 평양 남쪽 관문에 위치했었다. 10만㎡ 부지에 60kg이 넘는 화강암 2,560개를 사용하여 30m 높이, 61.5m 폭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는 두 명의 여성이 3대 헌장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구를 맞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기념탑 내부에는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관련 단체들이 보낸 기념 석재 740여 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 상징물이 철거된 것이다.



【사진 4】 남북관계 악화로 철거된 평양의 상징물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며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동족’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통일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시사한다.

9) 김반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한겨레:온, <https://www.hanion.co.kr>), 2025.03.07. 을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1980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¹⁰⁾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일 상징물의 철거는 물리적 구조물의 소멸을 넘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북한 대남 정책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필자(김반아, 캐나다 국적)는 외조부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학 교수인 동생과 함께 2017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내부를 관람하며 남과 북, 해외 동포들과 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기념 석재 하나하나에 깃든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깊은 감동과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때의 감동은 기념탑이 철거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념탑의 외형은 사라졌어도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정신은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

10)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1) 전민족 대단결로 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2)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대단결, 3)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며 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단결, 4) 동족 간 분열·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 5) 북침·남침, 승공과 적화를 하지 않고 신뢰·단합, 6)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단결,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 보호로 민족 대단결 도모에 이용, 8) 남북한 접촉·왕래·대화 보장, 9) 남북·해외 동포 연대성 강화, 10)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등이다.

